

2. 정부 정책 동향 (8. 31~9. 6)

<p>재정경제부(8.31): 은행 구조조정에 50조 원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9년 예정이던 것을 앞당겨 지원하여 9월 중에 BIS 비율 8%를 충족시키도록 할 방침 - 부실채권 매입,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
<p>공정거래위원회(8.31): 채무보증 초과 기업, 40억 원 과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라, 금호 등 8개 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자기자본 100% 이내로 축소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 - 한편 30대 그룹이 2000년 3월까지 해소하여야 할 채무보증 규모는 23조 9,000억 원으로 발표
<p>정부(9.1): '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' 발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정부의 경제 철학으로 '참여 민주주의와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'을 제시 - 이를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경제 질서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주장
<p>정부(9.2): 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올해 경제성장률을 -5%로 하향 조정하고, 통화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 논의 - 수요자금융 확대, 기업 설비 투자 촉진, SOC 건설 자금 조기 투입 등으로 디플레이션 방지
<p>당정협의(9.3): 99년 예산 86조 원 규모 편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5조 원(6%)이 증가한 수준 - 99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14조 원,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% 수준에 이를 전망
<p>재정경제부(9.4): 세계 개편안 확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현행 30~50%에서 각각 10%p 인하 -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만 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손비로 인정
<p>기획예산위원회(9.4): 정부위원회 개혁 착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8년 9월 현재 373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폐지, 통폐합 등으로 200여 개를 축소할 방침 - 위원회 신설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'일몰제'의 도입으로 위원회 난립을 방지
<p>정부(9.5): 빅딜 대기업,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개 업종의 구조조정을 발표한 5대 그룹에 대해, 구체적인 과잉 설비 정리 및 인원 감축 등의 자구 노력 이행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
<p>금융감독위원회(9.6): 5대 그룹 계열사 퇴출 작업 착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월 15일부터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전문가를 6개 시중은행에 파견하여, 5대 그룹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 내용을 평가 - 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 기업이 발생 가능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